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1251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강○○
피 고 1. ○○세무서장
2. ○○시 ○○출장소장
변 론 종 결 2024. 4. 26.
판 결 선 고 2024. 5.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 ○○시 ○○출장소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¹⁾ 268,639,931원, 가산세 155,013,29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시 ○○출장소장이 2022. 12. 9. 원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26,863,993원, 가산세 13,825,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1) 원고의 2023. 8. 24.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의 청구취지 기재 "부가가치세"는 오키임이 명백하다.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로서 2018. 5. 16. ○○시 C 대 13㎡, D 대 2,383㎡, E 대 9㎡, F 대 952㎡의 각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이 사건 법인에 증여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1,640,565,900원으로 평가한 뒤 담보채무액 826,641,443원과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2억 2,500만 원 등을 차감한 588,924,457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원고는 위 담보채무액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위 담보채무액의 인계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와 관련하여 이를 원고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로 보고 2022. 10. 13.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23,653,2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시 ○○출장소장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42,215,6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 2. 1.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3. 3. 2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28.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8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가 제1, 2, 3, 4호



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 ○○시 ○○출장소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시 ○○출장소장을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3호, 제103조 제2항, 제103조의2 제1호, 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3항,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와 같은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피고 ○○시 ○○출장소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86,548,890원의 임대료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이 사건 법인의 채권자인 G에 대하여 차용금 2억 원의 원리금을 대신 변제한 데 따른 259,951,000원의 구상금 채권과 463,150,433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분의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차익은 16,991,120원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양도차익이 1,051,641,443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



야 한다.

나. 판단

1) 임대차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갑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함께 1의 가항 기재 각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소유한 G가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합14655호)을 제기하여 2014. 1. 1. 이후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에서 이 사건 법인이 G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또는 구상금 채권을 상계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가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법인이 임대차보증금채권 4억 5,000만 원을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이 사건 지분 증여 이후 임대차보증금채권 2억 2,500만 원을 금액 계상한 점, ㉢ 원고가 G와 함께 공동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하면서 위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 이 사건 법인도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추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구상금 내지 대여금 채권 주장에 대하여

갑 제5, 6, 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가 2013. 1. 21. 이 사건 법인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실, G가 위 소송에서 위 투자원금과 배당금 합계 307,451,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였는데, 그 중 2014. 12. 26.부터 2017. 11. 30.까



지 원고 명의로 입금된 합계 89,101,000원, 2013. 6. 28.과 2018. 5. 29. 원고의 동생 H 명의로 입금된 합계 34,300,000원, 2016. 12. 30. I 명의 계좌로 입금된 22,500,000원, 2017. 6. 21. J 명의로 입금된 37,500,000원, 2018. 3. 21. K 명의로 입금된 26,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G의 계좌에 2016. 8. 5. L 명의로 61,600,000원, 2018. 5. 30. M 명의로 1,400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 2012. 7. 31.부터 2018. 6. 18.까지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법인의 예금계좌로 합계 647,901,252원이 입금되고 이 사건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합계 184,750,819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원고가 'B'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뒤 2018. 3. 30.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 이 사건 법인의 재무제표에 원고의 구상금 내지 대여금 채권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추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시 ○○출장소장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



[별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양도의 범위)

- ③ 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단서 생략)

■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납세의무자 등)

-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하 생략)

3. 양도소득

제97조(결정과 경정)

-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03조(과세표준)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괄호 안 생략)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제103조의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환산취득가액 등)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단서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5호 또는 제2항 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끝.